

시론



이정록

전남대 교수·前 대한지리학회 회장

해남군 '관동향 어촌뉴딜사업'에서 만난 사람들

을 상향식(上向式)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개발계획 수립에도 주민 참여는 필수다. 하지만 어촌뉴딜사업은 더 엄격하다.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계획의 방향과 내용과 예산 배분 등을 모두 결정한다. 협의체 리더도 어촌계장이나 마을이장이 맡는다. 연구팀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조력자 역할이다. 계획수립 과정이 철저한 상향식이다 보니 연구팀은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상적인 몇 사람을 알게 됐다. 먼저 조중현 위원장이다(광주매일신문 시론, 2021년 4월28일자). 벼농사와 고구마 경작과 김 양식을 겸하는 2억(億)대 농어업인이다. 교회 장로답지 않게 강력한 카리스마 소유자다. '나를 따르라'다. 때문에 일부 불만도 있지만 사업 처리엔 속도가 난다. 어촌뉴딜사업도 그렇게 성사됐다. 그의 꿈은 '이곳 관동마을에서도 도시민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후배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박남옥(61세) 사장은 '특화형 어민'이다. 벼농사는 짓지 않고 김 양식에만 치중한다. 도중에 어려움을 포용할 약 89억원이 투입됐다. 방파제, 연결호안, 어민센터, 공동작업장 조성 등 10개 사업이다. 어촌뉴딜사업 특징은 기본계획

리파이자 두주불사형이다. 양식업 미래에 대해 토론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해박하다. 이번 과정이 종료돼도 자주 어울릴 것 같다. 필자와 호형호제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김주희(39세)씨는 귀촌한 청년 어부다. 여수에서 태어나 관동으로 이주했다. 화산초교, 화산중, 해남공고를 다녔다. 관동 토박이나 다름없다. 고교 졸업 후 서울 근처에서 10여년 직장 생활을 했다. 재작년부터 부모님이 하던 김 양식을 도맡아 한다. 연간 위판액이 2억원 내외란다. 직장 생활과 비교가 안 되는 엄중을 거쳐 해남공고에 들어갔다. 농업 후계자가 돼 부모님과 함께 6만평에 벼농사를 했다. 10년 전 김 양식에도 뛰어들었고, 연간 위판액은 2억5천만원 내외다. 남부럽지 않은 대농(大農)이다. 향후 축산업에 진출할 계획도 있다. 직전 어촌계장 출신답게 어촌뉴딜사업 계획을 관동향 일대가 주말 어촌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되길 바란다. 학사 어부답다.

김동연(34세)씨는 학사 어부다. 관동에서 태어나 화산초교와 화산중을 거쳐 해남공고에 들어갔다. 농업 후계자가 돼 부모님과 함께 6만평에 벼농사를 했다. 10년 전 김 양식에도 뛰어들었고, 연간 위판액은 2억5천만원 내외다. 남부럽지 않은 대농(大農)이다. 향후 축산업에 진출할 계획도 있다. 직전 어촌계장 출신답게 어촌뉴딜사업 계획을 관동향 일대가 주말 어촌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되길 바란다. 학사 어부답다.

조명훈(30세)씨는 막내 농부이자 어부다. 하지만 경력은 올해로 9년차다. 관동에서 태어나 화산초교, 화산중, 해남공고를 졸업했다. 체육교사가 되려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여의치 않아 미련 없이 자퇴했다. 군 제대후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농사꾼이 됐다. 벼농사만 하던 아버지를 설득해 2014년부터 김 양식에 뛰어들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그는 조중현 위원장 아들이다. 관동마을은 어느 농어촌 마을에 비해 잘살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김 양식 때문이다. 관동향 일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천혜의 김 양식 보고(寶庫)다. 바다가 오염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유속이 빨라 조류 활동이 왕성하다. 해남이 고추와 함께 우리나라 물김 주생산지가 된 까닭이다. 김 양식은 벼농사보다 순소득이 배가 넘는다. 그래서 벼농사가 많고, 청년 농어부도 상대적으로 많다. 어촌뉴딜사업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관동향 어촌뉴딜 기본계획' 연구는 올해 끝난다. 하지만 관동마을과 교류는 계속될 듯하다. 그동안 막걸리로 다져진 끈끈한 인연 때문이다. 농어촌을 바꾸려는 합리적 리더와 청년들이 살고 있는 관동마을, '지방 소멸' 흐름을 비껴가야 할 텐데...

관동마을은 어느 농어촌 마을에 비해 잘살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김 양식 때문이다. 관동향 일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천혜의 김 양식 보고(寶庫)다. 바다가 오염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유속이 빨라 조류 활동이 왕성하다. 해남이 고추와 함께 우리나라 물김 주생산지가 된 까닭이다. 김 양식은 벼농사보다 순소득이 배가 넘는다. 그래서 벼농사가 많고, 청년 농어부도 상대적으로 많다. 어촌뉴딜사업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관동향 어촌뉴딜 기본계획' 연구는 올해 끝난다. 하지만 관동마을과 교류는 계속될 듯하다. 그동안 막걸리로 다져진 끈끈한 인연 때문이다. 농어촌을 바꾸려는 합리적 리더와 청년들이 살고 있는 관동마을, '지방 소멸' 흐름을 비껴가야 할 텐데...

社說 대장동과 다르다는 첨단3지구 대형개발 논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대형개발사업이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택지 분양 수입은 공사에서 전액 환수하고 아파트 분양 이익은 사업자에게 가지만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 원가 공개 대상인 만큼 과도한 이익은 제한된다며 "성남시 대장지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과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의혹을 불식하는데 공을 들였다. 하지만 우선협상계약을 앞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공모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는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소송 등 법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실제로 공사는 제안자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한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

격,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조2천억원이 투자될 대규모 프로젝트인 첨단3지구 공익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LH가 참여를 포기해 단독 추진하게 되면서 100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도 포함돼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대형개발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들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주시가 어등산과 평동, 중앙공원 등 대형 개발사업을 놓고 민간업체와 잇따라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3지구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는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소송 등 법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실제로 공사는 제안자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한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

통신장애 큰 혼란 KT 책임있는 조치 바란다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KT는 확인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물론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킨 꼴이 됐다. 언제든 이번과 유사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위기 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노출했다.

전화와 인터넷 가입자들은 큰 불편을 당했다. 점심시간이 겹치면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는 POS(점포판매시스템) 기기에 오류 코드가 떠 주문을 받을 수 없고, 배달앱·QR체크·카드결제 등은 먹통이 돼 고객들이 속속 발길을 돌렸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계좌이체하는 경우만 카운터 주문과 함께 이용할 수 있었다. 1시간 여가 지나서야 일부 복구되면서 뒤늦게 물리가 시작했다.

상황이 뻔한 아니다.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역시 접속 오류가 이어졌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진료와 수납

관련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 복새통을 이뤘다. 증권거래 시스템도 중단됐다. PC와 모바일 모두 검색이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도 불통되는 등 인터넷 기반 업무는 마비됐다.

KT는 공식 사과하고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천문학적 피해가 난 만큼 조기에 수습될지는 의문이다. KT는 앞서 2018년 11월 아현지사 통신구(케이블 부설을 위해 설치한 지하도) 화재에 이어 약 3년 만에 또 대규모 네트워크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관리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길 바란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초대형 재난급에 준하는 사태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적절하게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인 혼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의정칼럼



박종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소멸해법, 농어촌재생에서 찾아야

획 수립 지자체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국고보조사업(2조5천600억원) 활용 등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방소멸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자립'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정책 누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재원 투입만으로 정책적 정합성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때문에 정책 방향이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일자리·기초생활실·교육 등에 초점을 하도록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9월7일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 의회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을 농어촌 재생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경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지방소멸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반면, 전남에는 미래가능성도 상존했다. 지역잠재력

지수가 1.2 이상으로 전국 대비 높은 값을 차지하는가 하면, '20년 귀국고보사업(2조5천600억원) 활용 등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방소멸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남의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기초공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자립'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정책 누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재원 투입만으로 정책적 정합성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때문에 정책 방향이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일자리·기초생활실·교육 등에 초점을 하도록 추진돼야 한다.

지역 자생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등이 재생센터의 목표다. 하지만 시·군 재생센터는 지역별로 물리·환경·사회적 특성에 따라 업무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마을공동체, 사회적 거점, 도시재생 등 분야별 소관 부서가 달라 소위 스크럼을 짜기가 힘든 구조이다. 운영 재원 또한 미흡해 미래 지속가능성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차제에 전남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는 데 도시재생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적 구조의 전환부터 다시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재생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구로 두어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재생사업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정책이 형성되면, 집행과 평가, 환류가 이뤄져야 하기에 지방소멸 해소 정책에 도시재생센터가 지역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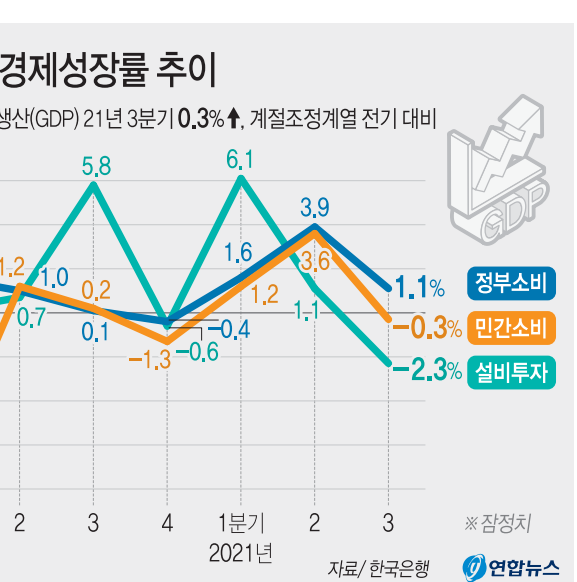
특히, 청년과 중장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및 마을기업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누구나 농어촌 삶에 활착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우선 하나의 사례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동적인 바이럴마케팅을 활용한 홍보는 지역 및 공간의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등기법칙을 공고히 해야 한다.

전남은 현재 위기지만 미래 '기회'를 품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재생의 특화지역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3분기 경제성장률 0.3%...올해 4% 성장 '빨간불'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치면서 지난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남은 4분기에 뚜렷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올해 연간 4% 성장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 3분기(0.3%)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앞선 1분기, 2분기와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고, 9월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하면서 3분기와 4분기에 각 0.6%(전분기대비) 정도 증가하면 올해 4.0% 성장 가능성이 분석했다. 일단 3분기 성장률(0.3%)은 0.6%의 절반에 그쳤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서비스(음식숙박, 오락문화 등)를 중심으로 0.3%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운송장비(자동차 등) 위축의 영향으로 2.3% 줄었고, 건설투자 역시 토목건설 위주로 3.0% 뒷걸음쳤다. 이처럼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에 힘입어 1.1% 증가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3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정부 650-2090 사·인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분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눈먼 돈' 인식 곤란

우리는 지금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받고는 있지만 수십년간 동토의 땅에서 살다가 자유사회에 발을 내딛는 첫발 걸음을 당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초기 대한민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우리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제2의 생활을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지급받는 경우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북한이

탈주민들을 응원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바 있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총청권 모 지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고 허위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적발된 바 있고 경상권에서도 위장취업 서류를 작성해 2천600만원을 부정수급 받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지원금을 눈먼 돈인 양 가로챈 비도덕 행위가 발생한 바 있어 우려스럽다. 고용지원금이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해 당해 취업보호 대상자의 임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이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물론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다. 업체의 입장에서 단순히 고용지원금을 눈먼 돈인 양 북한이탈주민 채용 또한 곤란하다. 더불어 사는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최근 수년동안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피로감이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 우리사회 일원으로 인정치 못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골치아픈 시선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도 더불어 동반돼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에 있어 동독이탈주민 57만명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통일의 초석이다.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덕형·장성철경찰 정보안보외사>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